

# MB 조카 이동형 “다스는 아버지 것”

### ‘불법 자금 조성 연루’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 협력업체 IM 설립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24일 다스는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이지만 실소유주는 동생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다스 회장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의 아들이자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 부사장은 불법 자금 조성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저희 아버지(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아버지가 월급사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질문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며 부인했다.

민주당 박법계 의원(적폐청산위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는 이 부사장 말이 담겼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협력업체 IM을 왜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가서 조사가 성실히 임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IM은 이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4차례에 걸쳐 이 회장 명의로 IM 측에 9억원이 입금됐다. 또 다스 통근버스 운영업체 대표가 이 부사장에게 매달 230만원씩 3년간 7200만원을 송금한 것도 드러났다.

만약 다스가 이 회장의 것이라면 굳이 협력업체를 만들어 다스에서 돈을 빼돌릴



평창올림픽 출전 선수단 선전 다짐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이석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세간의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IM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입사 이후 승진기도를 달린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는 대조적으로 이 부사장이 사실상 좌천된 것도 이 회장이 속칭 ‘바지사장’이 아니냐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장이 나온다. 총괄부사장 자리에 있었던 이 부사장은 지난해 ‘총괄’

직함을 됐다. 그는 현재 충남 아산 공장의 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이 부사장이 오너 일가이자 핵심 경영진인 만큼 검찰은 이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120억원 비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120억원을 횡령한 경리직원 조모씨의 퇴사를 이 부사장이 왜 면류했는지 등에 대

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백해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부사장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120억원의 비자금이 누구 돈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다스의 전 경리팀장이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이 부사장에게 다스에 가서 일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송성환이 꿈꾸는 상생’ 출판기념회 오늘 열려

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 3·사진)이 25일 오후 3시부터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송성환이 꿈꾸는 상생’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송 의원은 지난 2013년 ‘달팽이가 사랑한 온고을’ 출간에 이어 전주사의회 및 전라북도의회에서의 의정활동 경험과 삶의 철학을 담은 두 번째 저서를 발간하게 됐다.

‘송성환이 꿈꾸는 상생’은 제2장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 활성화 등 국가정책분야, 제2장 전라북도과 전주 도약을 위한 제3장 민주주의의 고찰과 양극화 해소 등 정치분야, 제4장 위안부 문제 전기요금, 경로당 출산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사회분야, 그리고 독서와 책의 의미를 강조하는 제5장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성환 의원은 “비록 책을 낼 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책을 통해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광범한 인간으로서도 민 앞에 다가가고 싶었고 지금까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출판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금품 제공 등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을 1월 24일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선거관위에 따르면 장수군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7년 9월부터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20만원 제공한 것, 선거구민 C씨에게는 사과 1상자를 선거구민 D씨에게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선거구민 E씨는 입후보예정자 A씨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구민 F씨는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당비 20만원 대납을 약속하고 사과 1상자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준법선거 실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대법원장 “법관들 성향 분류 어떤 경우도 안돼”

### “문건들,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상상 어려운 것”... 조직개편 등 제도 개선책 곧 마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입장문에서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사법부 구성원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규정하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 요소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오해 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기구 구성 등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방법은 추후 밝히겠다고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덧

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합당한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지듯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 조

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곧 출범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대법관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논의했고 대법관들도 “빠른 시일 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뉴시스

### 文대통령 “국·공립유치원, 임기 말 40%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비율 공약과 관련해 “이런 추세로 가면 임기 말에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인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 추경 예산 덕분에 원래 국가목표보다 배 이상, 370개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 450개를 만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보육 예산은 무려 8조7000억 원이다. 1980년대 초 한국 총 예산이 그 정도 금액이었다”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보육 부문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 보육에 대한 부담을 나라가 덜어드려 많은 돈 투입하는데,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만한 유치원 없다고 한다”며 “맛별이는 직장에서 일이 늘어난다면 시간대 보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유치원이 많지 않아서 부모들은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의 질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